

# 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2-32호 | 2022년 10월 27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노웅래 | idp.theminjoo.kr

## 전술핵 재배치, 한반도 핵전쟁을 불사하는 국민불안 발상

이 용 민 연구위원

### 《요약》

#### ■ 상황인식: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

-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, 핵對핵으로 대응해 한반도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무모한 발상

#### ■ 개념규정: 전술핵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순간 '전략핵'

- 한반도 면적상 핵무기 사거리로 전술핵-전략핵 구분 무의미, 사실상 '전략핵' 위험성 유발

#### ■ 쟁점평가: 현실성도, 실효성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

##### ① 한국 스스로, 한반도 비핵화 명분 상실

- 한미 양국이 북한에 일관되게 요구해온 비핵화 명분 제거, 북한 핵보유국 공식 인정 위험

##### ② 동맹국 미국도 불용, 한미동맹 근간 훼손

- 기존 비핵국가들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 희박, 미국의 핵 억지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

##### ③ 국제사회도 불용, 동북아 '핵 도미노' 위험

- 중국·일본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, 일본·대만 핵무장 등 동북아 핵 군비경쟁 초래

##### ④ 핵공포 속 평화는 허구, 배치해도 무용지물

- 무제한 핵 군비경쟁 유발, 배치해도 핵심권한(핵전략 공동설계, 핵 발사권 공유) 행사 불가

##### ⑤ 북한과의 핵 협상도 불가, 非등가적 거래로 인식

- 전술핵 재배치만으로, 북한이 모든 핵 폐기를 목표로 핵 협상에 나올 가능성 희박

#### ▶ 키워드: 북핵, 핵무장, 전술핵, 전략핵, B61 전술핵무기, 한반도 비핵화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# 1. 상황인식: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

- 북한의 무력도발 전개 및 7차 핵실험 전망 속, 여권 중심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 부각
  - 北 6차 핵실험(2017.9.3) 후에도 전술핵 재배치론 급부상, 5년여 만 핵무장론 확산 양상
  - 한미정상회담시 합의된 핵وقف선("실질적 확장억제 확인, 핵 등 모든 역량")과 연동된 모양새

- 윤석열 대통령,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"여러 의견 경청, 따져보고 있다" 언급 (10.12)
- 여권 고위관계자, "윤석열정부,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방안 곧 논의할 것" (10.13, 중앙일보 보도)
-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, '비핵화공동선언' 파기(10.12) 및 핵무장론 강화(10.17) 발언
- 국민의힘 당권주자들(유승민, 김기현, 조경태 등), 전술핵 재배치 및 핵개발·핵공유 등 주장
- ※ 11.4일 예정 한독정상회담시 NATO식 핵공유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 (10.17, 파이낸셜뉴스 보도)

- 전술핵 재배치론,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반입해 북핵 억지 및 협상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
  - 전술핵은 1958.1월 한국에 최초 반입되어 33년간 배치, 냉전해체에 따른 美 부시정부의 해외 배치 전술핵 철수 선언(1991.9.27)을 계기로 1991.12월 미국 본토로 모두 철거
    -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의도는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됨에 따라, 그 전력공백을 메워 한반도 세력균형 파괴에 대비한 것
    - 어네스트 존, 280mm 포, 핵지뢰, 서전트 단거리 핵미사일, 155mm 핵포탄 등 11개 유형 배치
    - 1967년 사상 최대 약 950기 기록, 1976년 약 540기로 감축 후 1985년 150기 정도로 감축
    - 1991.9월 美 부시 대통령은 냉전종식 상황에서 전술핵이 필수적이지 않다 판단해 전세계 지·해상 발사 전술핵 철수를 선언했고 11월 노태우 대통령도 '비핵화선언' 발표, 전술핵 100여기 모두 철수
  - 전술핵 재배치론은 한국 핵무장론 범주 5가지 주장 중 일부, 한미 공동 전술핵무기 관리방안

전술핵 재배치	•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기지에 재반입, 핵對핵 군사대응력 확보 주장
조건부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	• 전술핵 재배치와 동시에,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자는 주장 - 전술핵 배치 후 핵對핵 맞교환 추진, 또는 협상시한 넘기면 전술핵 배치 실행
한미 핵무기 공동관리구상	• 미국과 서유럽 5개국이 전술핵무기를 공동 관리하는 NATO 방식 핵무기 관리구상 • 'NATO 핵공유 프로그램' 적용, 유사시 한국 공군 전투기로 전술핵무기 투하 • 한국군이 전술핵무기를 경비하거나 핵 사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, 그러나 NATO와 마찬가지로 핵 사용 최종결정권은 미국이 보유
자체 핵개발	•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, 배치 및 관리 - 국제사회 우려 불식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절충안도 제기
공동 핵개발	• 「한일방위조약」 체결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핵무기 개발 - 한일간 분할된 핵지휘통제체계 구축 시나리오

-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나, 전술핵 재배치 물밑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
  - 美 핵전략자산(핵항모전단, 전략폭격기 등)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우선 기조, 핵무장론 선긋기
  - 그러나 복수 당국자, "대통령실이 전술핵 배치 포함 핵무장 여건 조성안을 1달 전부터 여당에 먼저 제안, 정부와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 추진 기반 다지기 시작" (10.11, 파이낸셜뉴스 보도)

## 2. 개념규정: 전술핵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순간 ‘전략핵’

### ○ 전술핵은 통상 전략핵과 달리, 아군의 지근거리 전장에서 사용하는 핵무기로 규정

- (전술핵) 핵전략 3요소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핵무기, 사거리 500km 미만
  - 8인치 포탄, 155mm 포탄, 지대지·대공·대함 미사일, 핵 지뢰·어뢰·기뢰·배낭 등 종류 다양
  - 보통 TNT 20킬로톤급 이하이나, 데비 크로켓 10~20톤급 및 랜스 100킬로톤급 등 파괴력 다양
  - ※ 1945.8월 히로시마·나가사키 폭격에 사용된 원자탄도 現기준에서는 전술핵 파괴력에 불과
- (전략핵) ICBM, SLBM,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 3요소(Nuclear-Triad)를 통해 사용되는 핵무기
  - 보통 사거리 5500km 이상, 파괴력 TNT 수백 킬로톤급

### ○ 한반도 재배치시 반입될 전술핵은 B61계열(B61-12 등), 미국을 대표하는 공중투발 핵무기

- B61계열 전술핵무기는 항공플랫폼(전투기·전략폭격기)에 탑재하는 중력투하탄(Gravity-Bomb)
  - 1968년부터 3000여기 생산 및 13개 모델 개발·검토, B61-4가 가장 많이 생산(1979년~ 695기)
- NATO 5개국 6개 美 공군기지에도 B61계열 전술핵탄두(3·4번 모듈) 배치, 약 190기 추정
  - 회원국 중 핵보유국(미·영·프) 제외, 26개 비핵국 중 독일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벨기에, 터키 배치
  - 5개국 공군은 이중기능전투기(DCA)를 통해 유사시 핵타격 대비, 탄두 수량은 엄격한 기밀로 관리
  - B61-3(0.3, 1.5, 60, 170킬로톤) 및 B61-4(0.3, 1.5, 10, 50킬로톤) 핵탄두 190기 수준 추산
  - ※ 미국 본토에는 B61계열 전술핵탄두 약 320기 비축 추정 (B61계열 약 645기 중 325개 전략핵탄두)
- 신형 B61-12 전술핵탄두는 미국이 B61계열 수명을 20년 정도 연장할 목적으로 전술핵 3종(B61-3·4·10) 및 전략핵(B61-7) 해체, 성능개량을 통해 개발한 ‘스마트 핵폭탄’
  - 美 핵탄두 개량사업(30년간 1조 달러 투입, 5종) 첫 성과물, 2020년 공중투하 실험 마무리
  - 2021.10월부터 본격 생산(400~500기),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비싼 무기로 평가(1기당 2500만 달러)
  -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(B-21) 및 F-35A, B-2, F-15E 등에 탑재될 세계 최초 정밀유도원자탄



(美 공군, B61-12 점검현장)



(F-35A 스텔스 전투기, B61-12 투하)

### ○ 전술핵은 한반도 배치시, ‘실질적 전략핵’ 그 자체로서 위험성과 파괴력을 가지는 핵무기

- 한반도 면적상 핵무기 사거리로 전술핵·전략핵 구분 무의미, 핵무기 실전배치 후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상대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략핵무기로서 작용
  - 現 전술핵·전략핵 구분은 냉전시대 미·소간 핵 군비경쟁에서 기원,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의 최소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었으므로 이것이 전략핵 개념 규정
- 전술핵이 전략핵무기의 가치를 가질 때, 핵무기의 군사적·정치적 파급력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
- B61-12도 폭발력 최대 TNT 350킬로톤급, 파괴력이 이미 전략핵급 (일본 원폭 약 20배)

### 3. 쟁점평가: 현실성도, 실효성도 없는 전술핵 재배치

#### (1) 한국 스스로, 한반도 비핵화 명분 상실

##### ○ 전술핵 재배치와 동시에, 역대 모든 정부가 정립한 비핵화 목표와 원칙 모두 파기

- 노태우정부의 ‘비핵화공동선언’(1991)부터 문재인정부의 ‘평양공동선언’(2018)까지 모든 합의, 민주·보수를 막론하고 추구해온 북핵해결 지향점을 우리 스스로 깨는 행위
-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인다고, 우리도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은 비이성적

##### ○ 한미 양국이 북한에 일관되게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 스스로 제거

-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위험 초래
- 북미간 대화와 협상으로의 복귀를 통한 비핵화 조치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무책임한 주장

#### (2) 동맹국 미국도 불용, 한미동맹 근간 훼손

##### ○ 美 국가안보전략(NSS, 10.12), “완전한 한반도 비핵화,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” 명문화

- 한국내 미군 전술핵 재배치 불가능 의미, 향후 발표될 美 국방전략서(NDS)·핵태세검토보고서(NPR)·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(MDR) 등에도 동일한 방향성下 구체적 내용 담길 것
- 美 정부 당국자들도 전술핵 재배치론 선긋기, 비핵화 및 확장억제 기조 재확인

-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, “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,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” (9.21)
-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, “다시 한번 확실히 하겠다,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,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” (10.11)
-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, “한국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은 철통 같다는 점(확장억제)을 확실히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” (10.11)
-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, “전술핵에 대한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위험” (10.18)
- 패트릭 라이언 국방부 대변인, “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에 집중” (10.20)

##### ○ 전술핵 재배치론 고집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억지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

- 미국은 그간 글로벌 핵감축 지속, 한국·일본 등 기존 비핵국들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 희박
- 전술핵 재배치시, 미국이 유지해온 세계적 차원의 핵 비확산정책 대대적 수정 불가피
  - 한미동맹에 엄청난 부담, NPT 근간을 흔들며 국제정치 양상을 더 복잡하게 하는 불안요소
- 확장억제를 공약한 미국으로 하여금 ‘한국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해야 하는가’ 의구심 야기

#### (3) 국제사회도 불용, 동북아 ‘핵 도미노’ 위험

##### ○ 중국·일본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, 한국 핵무장 확고히 부인

- 전술핵 재배치시 일본·대만 등 동북아 핵 군비경쟁 촉진, 국제사회에서 ‘불량국가’로 인식될 것
  - 일본의 자국에 대한 ‘비핵화 3원칙’은 한반도 비핵화 전제, 원칙 깨질시 역내 美 동맹구도 악영향

#### (4) 핵공포 속 평화는 허구, 배치해도 무용지물

##### ○ 핵對핵을 통한 상호확증파괴는 무제한적 핵 군비경쟁의 유인물(incentive)이자 결과물

- 핵 억지가 핵 경쟁으로 이어지는 역설, 북한 핵·미사일 도발을 지속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
- 핵 군비경쟁이라는 새로운 판도라가 열릴 것, ‘허구의 평화’ 입증
  - 냉전시대 미-소간 상대국 핵공격에 대한 생존 및 2차 보복능력을 위해 무제한적 핵 군비경쟁 전개, 각 1만여기 이상 전략핵무기를 보유했으나 불안감에 통제하다 결국 상호간 감축하는 결과로 귀결
- 결론적으로, 상호간 핵무기로 무장한 남북의 영구적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
  -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구축하고자 한 한국에 대한 보호망 불가, 상호 안전보장이 더 훼손되는 결과

##### ○ NATO식 핵공유 방안도 전술핵무기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귀속

- NATO내 전술핵 배치국 결정도 미국이 판단, 해당국 및 NATO 차원의 동의절차 전무
  - 현재 배치된 전술핵무기도 해당국내 미군 탄약지원대대(MUNSS)의 전적인 통제下 운용
- 미국의 명령과 결정 없이 전술핵이 사용될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이 기본 프로토콜
  - B61-12는 12자리 암호의 ‘카테고리F’ 탑재허가체계(PAL) 장착, 오직 美 대통령만 작동 권한 보유

- 美 ‘원자력법’: “핵무기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만 가능”
- 핵무기 전체에 보안체계(PAL) 부착, 워싱턴 국가군사지도부(NMA)가 직접 송신하는 긴급행동메시지 발사코드(EAM)를 입력해야만 활성화, NATO 해당국 기지의 미군 MUNSS가 EAM 진위 확인
- NATO 보고서: “NATO의 핵 책임 공유는 정의되지 않음, 총괄은 미국법에 규정”
- NATO 공식 웹사이트: “미국은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절대적인 통제와 보관을 유지한다”

- 한국도 마찬가지로, 전술핵 배치해도 핵심권한(핵전략 공동설계, 핵 발사권 공유 등) 행사 불가

#### (5) 북한과의 핵 협상도 불가, 非등가적 거래로 인식

##### ○ 북핵 협상론자들은 전술핵을 ‘외교적 핵(Diplomatic-Nuclear)’으로 활용, 핵對핵 포기 주장

- 전술핵 재배치로 대북 등가적 협상 추진, 비핵화 목표 달성 후 미국으로 다시 복귀시키자는 것
  - 임시 조건부 핵 배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전략적 접근 차원 논리

##### ○ 그러나, 전술핵 재배치만으로 북한이 핵 자체 폐기를 목표로 핵 협상에 나올 가능성 희박

- 북한은 한국과의 핵 협상이 등가적 거래가 아니라고 인식, 핵 협상의 비대칭 구조 성립
  - 북한은 단·중·장거리 핵무기(노동, 무수단, SRBM, IRBM, ICBM 등) 모두 보유, 한국이 재배치할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북한 입장에서 단거리 핵무기에 불과
  - 전술핵 1개 종류와 모든 핵무기 종류 간 상호 폐기는 북측이 보기에 상식 밖, 북핵 폐기 기대 불가
- 핵 협상의 목적(비핵화)이 아닌 부수적 효과(남남갈등, 한미동맹 균열 등)를 노릴 것이라 판단
- 협상 목적의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양국의 핵전략 개념 설계에 제한요소로 작용
  -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갖게 되는 모순된 결과 야기